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방정부의 목표체계 전환: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오 수 길**
한 순 금***

국문요약

이 연구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에 발맞춰 경상남도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SDGs의 틀에 주목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목표체계를 지속가능발전과 SDGs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기존의 칸막이 행정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협력적 거버넌스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였다. 이에 따라 행정의 주무부서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목표와 지표 도출 과정을 기획하고, 설문조사와 원탁토론회 등을 통해 경상남도형 SDGs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유엔 SDGs나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도 적절히 연동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경상남도는 SDGs의 틀을 부서의 이행계획이나 단위사업의 수행이 SDGs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성과관리 체계에 활용해야 할 것이며, 경상남도 내 시군 기초지자체와의 협력과 연계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속가능발전, 목표체계, 지속가능발전지표, 지방정부

I. 서론

2015년 9월 유엔 193개국 만장일치에 의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채택된 이후 각국에서 SDGs 지표 개발과 이행체계 구축이 핵심적인 논의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은 2016년 7월 다른 21개국과 함께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에서 SDGs 이행 시범평가를 수행한 이래 국가 SDGs 이행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들과 함께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내외 논의는 세계 지속가능발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고 할 수

* 이 논문은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시행한 2017년도 연구개발사업인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이행평가지표 개발'의 연구결과를 발전시킨 것이며, 2018년 한국지방정부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주저자

*** 공동저자

있다(가령, WCED, 1987; 오수길, 2003). 국내의 경우 유엔 SDGs의 채택을 전후하여 관련 연구는 좀 더 다양해지고 구체화되었는데(예를 들어, 오수길·이창언, 2013; 오수길·김은경, 2014; 오수길, 2016; 오수길·김은경·황순원, 2016), 한편에서는 SDGs의 채택으로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모호성이 다소 해결된 것이라 볼 수 있다(김은주·권혁주, 2015; 김인, 2015; 조성제·박현희, 2015; 박지연 외, 2016; 박정호 외, 2017; 이창언·오유석, 2017).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SDGs 17개 목표 간의 연계 접근방법(nexus approach)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예를 들어, Le Blanc, 2015; Stafford-Smith et al., 2017). Florini and Pauli(2017) 또는 Stibbe et al.(2018) 등은 SDGs 이행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가치 창출의 의의와 제고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연구는 나아가 SDGs 수립을 계기로 환경 거버넌스가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규범적인 논의로 헌법에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명시해야 한다는 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축적되고 있다(오수길, 2017).

SDGs 이행체계 구축의 핵심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의 수립,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의 수준을 진단하고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할 수 있다(오수길·김은경·황순원, 2016). 특히 유엔 SDGs의 글로벌 지표(Indicators) 역시 방법론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 중인데, 국가 단위의 다양한 지표와 데이터는 수집되고 있는 편이나 지방 차원에서는 활용하여 적용할 만한 지표 개발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경상남도의 경우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 핵심이 될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과 데이터 확보 방안을 검토하면서 향후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경상남도형 SDGs 이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상남도형 SDGs는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까? 기존의 중·장기계획들은 어떻게 활용되고 접목될 수 있을까? 도출된 경상남도형 SDGs는 국가 또는 유엔 SDGs와는 어떤 연계를 가질 수 있을까?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유엔 SDGs 채택의 의미와 국가 및 지방 차원에서의 의의를 밝히고, 경상남도형 SDGs를 도출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유엔 SDGs 17개 목표(Goals), 169개 세부목표(Targets), 232개 지표(Indicators)를 검토하면서 이와 연계할 수 있는 경상남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목표와 지표, 이행계획과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상남도 전역이고, 시간적 범위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경우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가능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현황이다. 내용적으로는 국·내외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표 종합 정리 및 분류·분석,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지표 풀(Pool) 구축,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 구축 제안 등이 포함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자문회의, 설문조사, 워크숍 등을 활용하기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과 국내외 동향

1. 지속가능발전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로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대해서는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1987)가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펴낸 소위 「브룬트란트 보고서(Brundland Report)」, 즉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개념화한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라는 설명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정치체제, 행정체제, 경제체제, 사회체제, 생산체제, 기술체제, 국제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WCED, 1987).

이 가운데 특히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체제 또는 이행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자기교정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체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먼저 유연한 행정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정책 분야가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 부서의 칸막이 속에서 개별 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담당 부서와 분야가 다르다고 하여 연계성 없는 제로섬 정책을 양산하기 쉬우며, 이는 보통 ‘칸막이 행정’ 또는 ‘사일로 이펙트(Silo Effect)’라고 일컬어진다. 기능 위주의 행정이라는 전통적 정책 추진 방식으로는 현대사회의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유연한 행정체제를 구축하자는 주장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유연한 행정체제가 지향하는 것은 총체적인 접근방법(holistic approach)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기존의 칸막이 행정을 극복하고 협력적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산출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각 기능 분야의 유기적인 연계를 지향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 위기를 진단하고 정책전환을 위한 인식 전환을 유도하며, 법과 제도적인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조직의 목표에 대한 공유,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구조의 구축, 구성원의 열정과 역량, 조직 목표의 평가와 관리 수단 등 성공하는 조직의 특성을 논의한 Magretta(2002)의 주장과도 맥락이 닿아 있다.

다음으로, 자기교정 능력이 있는 행정체제를 만들자는 것은 행정 내부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이나 대안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행정 외부의 다양한 주체들과 연계하자는 의미이다. 행정체제는 일반적으로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여 엘리트 집단을 형성하고 있지만, 동질적인 집단, 특히 관료제 내부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다른 대안이 제기되기 어렵다. 이는 외부와의 소통을 필요로 하며, 이것이 최근의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논의와 맞닿아 있다(예를 들어, 오수길·이춘열, 2018).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가시화할 수 있을 텐데, Gladwin et al.(1995)은 지속가능발전에는 시간적·공간적 포괄성, 연계성, 형평성, 안전성, 신중성과 같은 개념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그간의 다양한 정의를 귀납적으로 분석한 결과인데, SDGs는 이러한 특성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기도 하고, 국가나 지방의 구체적인 SDGs 도출 및 이행과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는 지구정상회담(Earth Summit)이 개최되는 등 전 세계 정부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천여 명의 시민들은 지구정상회담과 UNCED를 정부조직(GOs: Governmental Organizations)의 모임으로 규정짓고, 비정부조직(NGOs: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으로서의 500여 공식·비공식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글로벌포럼(Global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글로벌포럼이 동인과 압력이 되어 각국 대표들은 결국 국가 차원의 ‘의제21(Agenda 21)’, 그리고 지방 차원의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을 합의하여 채택하게 되었다.

2012년 리우+20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치적 관여를 새로이 하고, 현재까지의 진척과 주요 회의의 결과 이행의 간격을 평가하며, 새롭게 등장하는 도전들을 다룬다는 목적 하에 두 가지 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지속가능발전과 빈곤 근절이라는 맥락에서의 녹색경제이고, 둘째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의 정립이다. 즉 지속가능발전의 본래적 개념을 더욱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과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핵심적으로 모색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리우+20회의는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이행체계를 수립하자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지속가능발전지식플랫폼(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을, 그리고 Post-2015의 마련과 이행을 위해서는 고위급 정치포럼(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후 2015년 9월 유엔 193개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2001-2015년까지 15년의 목표 기간을 설정했던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대한 주요 결과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의 모색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전 세계적인 새로운 이행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결과물로서의 유엔 SDGs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를 참여시키기 위해 17개 목표(goals), 169개 세부목표(targets), 그리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230개 평가지표(indicators)로 구성되어 확정된 것이다.¹⁾ 2015년 9월 25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총회에서 ‘우리 세계의 전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의 선언문이 그것이다.

유엔 합의문 서문은 “이 의제는 사람, 지구, 그리고 번영을 위한 행동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좀 더 많은 자유가 있는 보편적인 평화를 강화하고자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국가와 모든 이해당사자들은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이 계획을 이행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경로를 향해 세계를 전환시키는 데 긴급히 필요한 대담하고 변혁적인 단계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러한 집단적인 여정에 나서는 데 어느 누구도 뒤에 남겨 놓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라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United Nations, 2015: 3).

1) 평가지표의 경우 데이터 수집을 위한 방법론 존재 여부와 데이터 가용성 여부를 중심으로 Tier 1, 2, 3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지표의 수가 조정되어 왔는데, 각 목표별로 중복된 평가지표를 제외하면 현재는 232개이다.

유엔 SDGs는 다음과 같이 5P 축으로 대표되는 5가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사람축(People)은 모든 인류가 존엄성과 평등 속에서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과 기아를 종식시킨다는 의미이다. 둘째, 지구축(Planet)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한 행동을 비롯하여 지구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 현재와 미래의 필요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셋째, 번영축(Prosperity)은 모든 인류가 번창하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진보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넷째, 평화축(Peace)은 근심과 폭력 없는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파트너십축(Partnership)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필요에 특히 초점을 두면서 모든 국가, 모든 이해당사자, 모든 사람들의 참여로 강화된 지구적 연대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부흥시킴으로써 이 의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들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ICLEI는 SDGs가 채택된 이후 세계 각국의 도시들과 함께 SDGs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²⁾ ICLEI는 지속가능성을 향해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한 초석의 정신과 비전을 1992년 리우회의에서 합의된 의제21(Agenda 21) 제28장, 즉 지방의제(Local Agenda 21)에서 찾고 있으며, SDGs를 달성하기 위해 특히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목표'인 11번 목표를 중심으로 도시 의제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ICLEI(2016, 5: 3-4)는 "SDGs는 중앙정부의 분열을 초래하거나 문제가 되는 어려움들에 대해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어떻게 도시 수준의 움직임이 SDGs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

- 첫째, 도시는 지방의 문제와 국제적인 문제가 동시에 다뤄져야 하는 곳이다.
- 둘째, 도시는 주요 활동가들을 동원할 수 있다.
- 셋째, 지방정부들은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의 선구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 넷째, 도시는 혁신과 야심찬 아이디어의 허브이다.
- 다섯째, 도시와 광역권역은 경제 활동과 자원 흐름의 중심이다.
- 여섯째, 도시가 변하면 세계가 변한다.

지속가능발전 개념에는 단일한 청사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도(Baker et al., 1997: 4) 오히려 다양하고 서로 상충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창조적인 사고와 실천의 촉매'(O'Riordan, 1995)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Jacobs, 1991: 59-60)도 적지 않았다.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논의는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단일한 경로를 강조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

2) ICLEI(이클레이 -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는 지방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모인 유엔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적인 조직이다. 1990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1차 지방정부 세계회의'에 참가했던 43개국 200여 개 지방정부가 유엔의 지원으로 창립했고, 2017년 현재 87개국 1,500여 개의 지방정부가 회원 도시로 있다. 창립 당시의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라는 명칭이 2003년 현재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나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개념(Atkinson, 2000: 30)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상남도형 SDGs는 이와 같은 권한 부여와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도민 참여를 통해 갖춰질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 지방정부 SDGs 추진 동향

민선 5기 이래 인천 부평구, 서울시, 충청남도, 서울 도봉구, 강동구, 광주광역시, 충남 당진시, 경기 수원시 등 일부 선도적인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조례 등을 제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수립해왔다. 이 가운데 인천 부평구는 2006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모델을 가장 충실하게 적용해 왔는데, 2012년 1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선포한 이후부터 최근 유엔 SDGs와의 연동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발전 추진 시스템을 완결성 있게 선도적으로 추진하였다.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행정에 접목시켰으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³⁾

서울시는 2013년 5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4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모델을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다. 2017년 1월에는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4월에는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11월에는 유엔 SDGs에 발맞춰 서울 SDGs 2030을 수립하였다. 또한 2019년 상반기 중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서울 SDGs 2030에 따라 SDGs 지표를 새로이 수립하고 있다.

서울시 도봉구는 2012년 지속가능발전팀을 신설하여 환경행정을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추진하다가 2015년 1월 행정 전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인 지속가능발전추진반으로 전환하였다. 2015년 11월 지속가능발전조례를 제정하였고, 2016년 4월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8월에는 지속가능발전추진단으로 행정조직을 전환하여 지속가능협치팀, 지속가능기획팀, 지속가능사업팀으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과를 신설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 최우수상(2015년 제17회, 릴레이벼룩시장)과 우수상(2017년 제19회, 대전차방호시설 공간재생 사업)을 수상하기도 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1995년에 구성된 광주광역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인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구 푸른광주21협의회)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광주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증대되어 왔다. 2014년 7월 출범한 민선 6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백년광주' 공약과 정책의지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공약과제를 담은 「더불어 사는 광주 4개년 계획」에 "과제 3-3 각종 도시 미래계획 수립에서 지속가능성과 시민참여 보장"이 제시되었다. 2015년 10월 27일 푸른광주21협의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백년광주 지속가능발전 비전선언'을 했다. 광주광역시는 지속가능발전 광주이행

3) 2018년 7월 제3차 부평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계획을 수립하고, 4대 전략과 16대 과제가 유엔 SDGs 달성에 기여하도록 체계를 만들었고, 이를 위한 평가체계와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충청남도는 2010년 6월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당시의 상위법인 ‘녹색성장기본법’의 틀 내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지속가능발전담당관을 설치하였으며, 지속가능발전의 여건을 진단하고 공무원 교육과정에 지속가능발전교육과정을 넣는 한편,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민선 6기에서는 기존의 실국장 성과계약제에 충남형 SDGs를 이행하기 위한 각 부서의 핵심 이행과제를 성과계약에 포함시켰다.

충남 당진시는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당진시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의 필요성을 논의해 왔고, 2017년 들어 공무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사회 각각 또는 공동 워크숍을 통해 12월 17개 당진형 SDGs와 57개 전략(세부목표)을 설정하였다. 또한 88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선정하였고, 각 부서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들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지속가능발전팀을 신설하였다. 지속가능발전팀은 민선 7기 들어 17개 목표별 부서 예산 규모를 가늠해 보는 한편, 지속가능발전 선도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2017년 3월부터 유엔 SDGs에 대한 수원의 대응계획으로 수원형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해 왔다. 수원형 SDG 작성을 위한 비전특위 구성, 시민설문조사, 시민온라인참여캠페인, 주제별분야별 워크숍, 시민참여원탁토론회, SDG전문패널작업반가동, 전문가 용역 등을 통해 시민참여형으로 작성했다. 분야별 위원회별 워크숍과 수원시 SDGs 작성 후의 300인 원탁토론회를 거쳐 2017년 11월 22일 민관 공동선언을 했다. 2018년부터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시 강동구는 2012년 6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제반 정책 제안과 지속가능발전실천계획을 수립, 추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남구는 민선 6기 들어 기존의 건설교통국을 지속가능도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해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2016년 들어 기획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의 주요 팀장들과 함께 ‘남구형 SDGs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기존 남구의 비전과 연계하여 남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하였다. 이후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투표를 거쳐 이 가운데 34개 지표를 남구의 지속가능발전지표로 선정하였고, 34개 지표 가운데 총 718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한 주민투표(스티커 투표)를 통해 9개의 대표지표를 확정했다. 2016년 말부터는 ‘남구형 SDGs 추진단’을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로 전환하여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에는 남구형 지속가능발전 지표값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해 왔다.

전반적으로 볼 때, 선도도시들의 경우 추진주체의 구성과 기본조례 등 추진기반 마련, 그리고 유엔 SDGs를 응용 또는 적용한 자체 SDGs 수립이라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내부 구성원과 광범위한 시민참여에 의해 목표를 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한 당진시의 경우와 같이 구성원들이 합의한 목표 설정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적절히 연계되는 것

이 우선 중요함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이행과정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참여와 함께 행정 내부의 이행계획이 적절히 모니터링 되고 여타의 제반 중장기계획과 연동될 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

지표들은 SDGs와 세부목표의 이행 전략 수립 및 자원 배분을 지원하는 관리 도구이며, 지속가능발전 이행 상황을 측정하고 목표에 대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보고 카드(reporting cards)가 될 것이다(SDSN, 2015).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표 간 상호연관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목표와 세부목표들의 진전은 다른 영역에 의존하게 되므로 많은 목표들이 한 개 목표 이상의 모니터링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전 영역에 걸쳐 있는 이슈들을 잘 추적해서 이행을 위한 통합적이고 시스템에 기반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SDGs는 모든 국가의 연간 보고를 의무화하여 품질이 높은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통계역량을 높이고 통계 품질과 표준을 강화하는 데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통계당국이 글로벌, 국가 SDG 지표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지표들은 여러 개의 SDG 세부목표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여러 세부목표들은 여러 개의 지표들을 필요로 하므로 어떤 이슈의 일부분만을 다루더라도 명확하게 정의된 변수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표는 간단하고 소통하기 쉬워야 한다.

2015년 3월 제46차 유엔통계위원회는 글로벌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2030 아젠다 목표와 세부목표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들을 개발하고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SDGs 지표 전문가 그룹(IAEG-SDGs :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을 만들어 지표를 수정하고 정교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3월에는 241개의 지표를 확정하여 발표하였으며(중복제외시 230개), 2017년 3월 열린 제48차 유엔통계위원회(UN Statistical Commission)에서는 232개 지표를 확정하였다.

UCLG(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의 경우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각 지방정부가 활용 가능한 SDGs 세부목표를 제안한 반면,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보고서는 국내 차원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진단 가능한 SDGs 지표를 도출하기도 했다.

이밖에 참조할 수 있는 유엔 해비타트 도시 번영 지수(City Prosperity Index)의 경우 2012년 유엔 해비타트가 도시차원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글로벌 모니터링 도구이다(UN-Habitat, 2016a). 2013년에는 이것이 지방정부와 국가정부가 공간, 인구,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문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확대되었다(UN-Habitat, 2016a). 도시번영지수(CPI)는 전 세계 4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이미 시범 적용되어 글로벌 모니터링 틀로써 활용되고 있으며, 인프라, 생산성, 삶의 질, 형평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등 6개 분야 2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UN-Habitat 2016b).

국제 표준 도시 지속가능성 지표(ISO 37120: 2014)의 경우 글로벌 도시들의 비교분석을 위하여 2014년에 국제표준기구(ISO)에서 최초의 도시 표준 지표로 '공동체 지속가능발전 ISO 37120'을 개발한 것이다(Global Cities Institute 2015). 17개 항목 총 10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46개 핵심 지표와 54개 보조지표로 구분된다. 각 도시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표별 정의와 방법론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2014년 설립된 세계도시데이터협의회(World Council on City Data)⁴⁾에서 국제 표준 도시 지속가능성 지표 인증 시스템과 글로벌 도시 등록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WHO 건강도시(WHO, 세계보건기구), LiveCom Awards(UNEP, 유엔환경계획), City Green Star(UEA: 세계도시환경연합), Global 500(UNEP), LEED-ND(미국), BREEAM-Communities(영국), CASBEEUD(일본), Ecological Footprint(Global Footprint Network), 도시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구현을 위한 연구(Puppim de Oliveira JA et al., 2011),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평가지표의 결정(Laedre O et al., 2015) 등을 통해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지표를 개발하고 도시를 평가하는 정책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국립환경과학원, 2014).

국내 도시환경의 평가를 위한 연구는 녹색도시의 건강성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13), 녹색성장도시 모델 및 지표 연구(최수영, 2011), 지방자치단체 저탄소 녹색경쟁력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고재경과 김희선, 2010), 삶의 질에 관한 평가 지표 연구(송건섭 등, 2008), 도시의 환경성 평가지표 연구(환경부, 2007), 환경상태의 평가를 위한 주민환경지표의 개발(김명진 등, 1993), 환경지표의 종합체계화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국립환경과학원, 1990-1992)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표개발이 이루어졌다. 연구를 토대로 개발된 지표를 계획에 적용한 사례로는 부천 고강 에코시티 시범사업(도시환경연구센터, 2009), 순천시 에코시티 시범사업(도시환경연구센터, 2010) 등에서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환경계획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 및 대안으로 제시된 주요 항목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건축물, 녹색교통, 물순환체계, 자원순환, 생태네트워크 등이다.

또한 정책방향 및 녹색도시 인증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저탄소녹색도시(환경부, 2010), 기초지자체로부터 환경친화적인 도시행정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린시티(환경부, 2012), 기초지자체의 공모를 통해 저탄소녹색성장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생생도시(녹색성장위원회, 2012)를 비롯해 살고 싶은 도시, 저탄소녹색마을, 녹색도시 인증제 등이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지자체의 경우 부평구, 충청남도, 서울시, 광주광역시, 수원시 등이 지속가능지표를 운용하고 있다.

4. 분석의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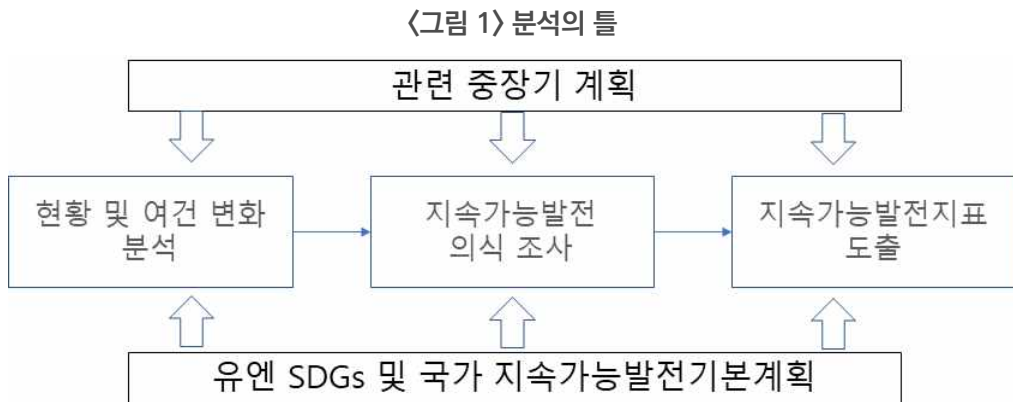
이 연구는 지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

4) 2014년 2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글로벌 도시 정상회의(Global Cities Summit)'에서 국제 표준 도시 지표 ISO 37120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Global Cities Institute 2016: 10).

요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자문회의, 기존 계획에 대한 문헌 검토, 우선순위 영역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조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참여형 원탁회의 등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기존 계획에 연구를 위해 경상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전문가, 시민단체, 행정기관이 포함된 경상남도 SDGs이행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자문 pool로 활용, 3회에 걸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 ‘SDGs이행추진기획단’을 통해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지표와 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경상남도의 지표의 추이 및 관련 정책 등 현황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통계연보, 도정백서, 환경백서 등 문헌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담당공무원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 이해관계자들(행정, 기업, 시민사회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경상남도형 SDGs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선정하는 데 참고하였다. 지속가능발전 세부목표와 이행계획(안)에 대한 행정담당부서 확인 및 의견수렴과 주체별 실천과제 작성도 거쳤다.

이를 <그림 1>과 같은 분석의 틀로 정리할 수 있다.



Ⅲ. 경상남도 정책환경과 도민 의식 분석

1. 경상남도 대내외 정책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쟁점

경상남도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환경 분석을 위해 대외적으로는 제3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을, 대내적으로는 경상남도 전반적인 계획과 전략인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2012-2020)과 경남 미래 50년 전략을, 환경과 사회 분야의 대표적인 계획으로 경상남도 환경보전계획(2016-2025), 경상남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 제5차 경상남도 지역에너지계획(2015-2019)을 분석하였다.⁵⁾

5) 각 계획의 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계획들을 참조하였다.

2016년 1월에 발표된 제3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하에 ‘건강한 국토환경’(환경 분야), ‘통합된 안심사회’(사회 분야), ‘포용적 혁신경제’(경제 분야), ‘글로벌 책임 국가’(국제 분야) 등 4대 목표, 14개 전략, 50개 이행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키워드로는 환경 분야에서 ‘선진적 오염배출 관리체계’, ‘건강·웰빙에 대한 관심’, ‘생태계서비스 개념 확산’ 등을, 사회분야에서 ‘사회적 구성원의 다양성’, ‘에너지복지’, ‘환경성질환’, ‘환경오염 피해 구제’, ‘지하 공간 안전 등 사회 안전’, ‘기후변화 적응’ 등을, 경제 분야에서 ‘혁신’, ‘안전한 일자리’, ‘청년일자리 확보’, ‘사회적 기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사용, 신재생에너지 비중, 비정규직 차별, 양성평등, 재해·안전 등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취약 분야를 반영하였으며, 양극화, 에너지, 지역불균형, 일자리, 취약한 거버넌스, 저출산 고령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등 전문가 진단(포럼, 자문)에 따른 위협요인도 반영하였다. 또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고려하여 17개 목표를 전략 수준에서 국내 여건에 맞게 반영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6: 29).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은 ‘성장과 복지의 순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사회 경남’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전의 양적 성장과 물적 개발시대를 넘어 질적 성장과 사회, 경제, 공간의 통합 발전으로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온 경남은 풍부한 산업입지 조건을 기반으로 제조업 위주의 양적·물적 성장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인구증가의 정체 등 사회경제적 성장 잠재력이 점차 저하되어 갈 것이 예상되며, 그 동안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의 악화, 그리고 성장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증가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등 많은 과제를 노정해 오고 있다. 향후 경남의 미래는 지금까지의 팽창적 개발시대를 벗어나 사회와 경제, 그리고 공간이라는 지역발전의 구성요소가 통합되는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에 기초하여야 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계획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녹색 환경, 더불어 나아가는 균형발전, 다함께 누리는 복지, 세계 속으로의 도약, 지속가능한 성장, 매력적인 문화 창조 등의 목표가 포함된다.

경남 미래 50년 전략은 ‘인간/환경/지식 중심의 선진경남 실현’을 계획의 이념으로 삼고 있고, 기술·정보 주도의 첨단 경남, 자연과 공생하는 환경 경남, 삶의 질을 지향하는 자치 경남, 세계와 하나되는 열린 경남 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각 목표에는 기술·정보·지식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 깨끗한 자연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 창출, 소외된 도민의 삶을 배려하는 사회복지 구축,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기반 시설 확충 등 17개의 전략과 수단이 연계되어 있다. 또한 항만중심 신해양 항만산업 육성,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과 같은 경남 차원의 과제를 비롯하여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창원시),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진주시)과 같은 기초지자체별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경상남도 환경보전계획은 풍부하고 우수한 자연자원 보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경남,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한 체계적인 환경정비 지속,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복지 등 선도적 추진 등의 강점(Strength), 전국에서 높은 대기오염물질 및 화학물질배출량, 경남도 환경자료 GIS 미구축, 시군간 환경서비스 격차와 같은 약점(Weakness), 민간환경단체 역할 증대,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에

대한 수요 증가, 국제사회와의 협력 증대, 국제 환경회의 개최 등을 통한 경남도민의 생태계 및 환경교육 관심도 증대와 같은 기회(Opportunity), 온실가스 배출량 상승에 따른 기후변화 심화, 녹조 발생에 따른 낙동강 수자원 확보 어려움,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 노출 증가, 황사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위협 심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침체 등 위협(Threat) 등 SWOT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따라 4대 부문별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경남(자연환경), 경남도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행복경남(생활환경), 환경과 미래첨단산업이 상생하는 미래경남(환경-경제·사회),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선도경남(지역·지구환경) 등의 비전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4대 부문에 16개 분야, 58개 추진전략 168개 세부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표 1〉 주요 계획이 분석·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쟁점

구분		지속가능발전 이슈
지역적 특성	자연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을 활용한 에너지 발전 가능(통영, 거제, 남해 등 일부 해안지역 제외)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폭염, 평균기온 상승, 홍수 등)
	사회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증가 • 가구구조 다양화 • 고령화(군/농촌 지역 고령화) • 외국인 증가 • 1인 가구 증가 • 독거노인 비중 증가 → 에너지 저소비 가구 • 도시지역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증가
	지역경제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평균보다 낮은 고용률 • 청년층의 취업자 비중이 낮음 • 지역내총생산은 연평균 증가율과 전국 대비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 •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국평균보다 높으나 연평균증가율이 낮음 • 산업 부문별 지역내 총생산액은 제조업이 가장 높으나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 • 전국 최다 산업단지 보유 • 축산가구 감소 • 자가용에 대한 에너지 절약 • 도로 포장률의 급격한 증가
계획별 제안	유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기후변화 영향, 소득과 부의 불평등, 에너지 기본권,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 경제, 생태계 보전, 빈곤, 지속가능발전 이행, 파트너십, 도시의 회복탄력성, 어족자원 고갈, 난민, 산업의 지속가능성,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생산 감소, 건강 시스템, 거버넌스, 과학 기반 정책
	제3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화학물질 관리, 생태계 서비스 기반 관리,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물순환, 온실가스 감축, 양성평등, 장애인·다문화가족 지원, 사회 안전 확충, 예방적 건강관리,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성, 공정거래 등, 환경-사회-경제 부문 간 통합성 강조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자연과 인간의 공존, 지속가능한 순환사회, 성장과 복지, 녹색산업과 전략산업, 기후변화 대응, 방재, 균형발전, 보편적 복지, 생활복지 강화, 여성친화
	경남 미래 50년 전략	안전, 공직비리 예방과 부패척결, 청년 일자리, 잘사는 농어촌, 서부 대개발, 안락한 정주체계, 낙동강·남강의 보전
	경상남도 환경보전계획	환경과 경제의 상생, 자연과 인간의 공존, 환경-경제 통합, 환경-사회 통합,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력 강화
	제3기 지역 사회복지계획	저출산, 인구고령화(향노화산업), 저성장, 파트너십, 섹터간 협력체계, 생활형 복지, 다양한 가족형태, 여성이 경제활동, 복지재정, 양육 지원, 독거노인공동주거제
	제5차 지역 에너지계획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이용 합리화, 집단에너지 공급, 에너지 복지

경상남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환경과 여건 변화 전망을 인구구조의 변화, 복지욕구 다양성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 등 사회복지 패러다임 변화,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가족기능 약화,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제활동 증가, 사회복지재정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민이 더불어 즐거운 여민(與民)의 복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사업간 연계 및 협력 활성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체계적 지원을 통한 사업 내실화, 사회적 기반 조성을 통한 균형지원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제5차 경상남도 지역에너지계획은 에너지 공급대책, 신재생에너지 보급대책,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온실가스 저감대책, 집단에너지 공급대책, 미활용에너지 적용대책, 기타 지역에너지 대책 등 부문별 대책의 추진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부문별로 2035년 1차 에너지 소비 전망 대비 11.0% 절감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에 관한 정부 목표에 비춰 2020년 1차 에너지 소비 전망 대비 6.0% 등 경남 목표를 설정하고, 2020년 1차 에너지 소비 전망 대비 11.6% 달성 등 5차 계획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경상남도의 주요 계획이 분석하고 있는 자연 환경, 사회 환경, 지역 경제의 특성 등에서 도출한 지속가능발전 관련 쟁점과 주요 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쟁점을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 경상남도 SDGs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

경남도민 대상 환경보전 의식조사 결과는 경상남도(2016)의 「경상남도 환경보전계획(2016~2025)」 수립시 조사결과이다. 2016년 경남도민 및 전문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상도 전반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및 자연환경, 생활환경, 환경과 경제·사회의 통합, 지역 및 지구환경 분야 등에 대한 영향 및 중요성을 도출하여 쾌적한 환경경남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경상남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전반적으로 경상남도 환경오염 심각정도는 5점 만점에 3.12±0.78점으로 전반적인 환경오염 심각 정도가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분야별 경상남도 환경문제 심각정도는 5점 만점에 대기 분야가 3.36±0.90점으로 가장 높았고, 폐기물,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분야 각각 3.29점, 연안환경, 소음·진동 분야 각각 3.16점, 악취 3.13점, 수자원·수질 3.12점 순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가 환경문제 중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 1순위는 폐기물(쓰레기) 분야가 16.1%로 가장 높고, 대기 14.4%, 자연생태 및 자연경관 14.0%,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13.3%, 수자원·수질 분야 12.4% 순으로 조사되었다.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는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7년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행정·유관기관·사회단체 설문조사 협조 요청, 온라인 설문조사로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수행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전체 894명 중 남성이 55%, 여성이 45%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연령 분포는 40대

6) 여민(與民)이란 ‘주민과 함께 하다.’라는 의미이다.

(31%), 30대(26%), 50대(22%), 20대(16%), 60대 이상(4%) 순이다. 응답자의 직업분포는 공무원이 56%로 가장 많고, 그 외는 사회단체활동가, 회사원, 자영업자, 학생, 주부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거주지역 분포는 경상남도 내 전체 18개 시군에서 고른 참여를 보였으며, 응답자 비율은 인구비율과 유사했다(〈표 2〉 참조).

설문조사 결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지도는 들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78%로 다수였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응답자가 78%이며, 응답자의 직업 분포별로 인식도는 교사가 100%로 가장 높고, 사회단체활동가(93.3), 교수·연구원(90.9%), 공무원(79.6%) 순이었다(〈표 3〉 참조).

유엔 SDGs에 대한 인지도의 경우 자세히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49%). 응답자의 직업 분포별로 아는(무엇인지 알고 있다+남에게 설명할 정도로 잘 알고 있다) 비율은 교수·연구원이 50%로 가장 높고, 사회단체 활동가(34.7%), 자영업자(16.0%) 순이었으며, 공무원의 인지도는 9.3%로 매우 낮았다(〈표 4〉 참조).

〈표 2〉 설문 응답자의 경남도내 지역 분포

구분	계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양산시	거제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함안군
응답수	894	225	51	154	41	42	40	60	46	21
선택률(%)	100%	25%	6%	17%	5%	5%	4%	7%	5%	2%
구분	거창군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합천군	남해군	함양군	산청군	의령군	무응답
응답수	22	21	21	22	30	21	20	26	21	10
선택률(%)	2%	2%	2%	2%	3%	2%	2%	3%	2%	1%

〈표 3〉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지도

구분	계	있다	없다	무응답
응답수	894	701	189	4
선택률(%)	100%	78%	21%	0%

〈표 4〉 유엔 SDGs에 대한 인지도

구분	계	들어는 봤으나 자세히 모른다	모른다	무엇인지 알고 있다	남에게 설명할 정도로 잘 알고 있다.	무응답
응답수	894	442	341	87	19	5
선택률(%)	100%	49%	38%	10%	2%	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중 경남지역에서 가장 시급히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목표는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의 경우 3. 건강과 웰빙(8.9%),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8.8%), 4. 양질의 교육(6.7%),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6.1%), 10. 불평등 감소(6.0%)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SDGs 우선순위

구분	계	목표1	목표2	목표3	목표4	목표5	목표6	목표7	목표8	목표9
응답수	5163	282	263	460	344	261	278	290	453	279
선택률(%)	100%	5.5%	5.1%	8.9%	6.7%	5.1%	5.4%	5.6%	8.8%	5.4%
구분	목표10	목표11	목표12	목표13	목표14	목표15	목표16	목표17	무응답	
응답수	311	313	242	269	275	299	294	250	0	
선택률(%)	6.0%	6.1%	4.7%	5.2%	5.3%	5.8%	5.7%	4.8%	0%	

전반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도민들이 지속가능발전이나 SDGs에 대한 이해는 높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SDGs 각 목표에 대한 내용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는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며, SDGs의 우선순위로 나타난 도민의 인식과 요구는 건강, 일자리, 교육, 도시문제, 불평등 등 경상남도의 어려움으로 인지되어왔던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IV. 경상남도 SDGs와 활용

1. 경상남도 SDGs와 지속가능발전지표

경상남도 SDGs는 기존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관련 경제·사회·환경지표, 녹색경남21 지표, 유엔 SDGs의 기본 철학과 메시지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이러한 설정 과정은 설문조사의 설계와 해석을 위한 관련자들의 자문회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진의 경상남도 SDGs 초안에 대한 원탁토론회, 원탁토론회 논의 결과를 반영한 초안의 수정 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관련 경제·사회·환경 지표, 녹색경남21 지표 등을 토대로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키워드를 세부목표 및 지표에 반영하였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경우 혁신, 공유경제, 사회적경제, 동반성장 등 포용적 성장, 고용의 안정성과 지역 간 발전 격차 해소 등을 포함한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경우 포용과 배려, 공동체 복지, 고령화 대응 노인 복지, 공공보육 등 일과 가정의 양립, 취약계층 안전망, 건강과 삶의 질, 평생교육, 문화적 다양성, 공공주거 강화, 도시 안전, 도농 공동체, 차별 없는 교통복지, 대중교통 확대 등을 포함한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경우: 물, 대기, 공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서비스, 생물다양성, 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후변화 적응과 회복력 대책,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효율향상,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 환경적 수용능력 등을 포함한다. 거버넌스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지방분권, 주민참여, 미래세대 배려 등을 포함한다. 경상남도 SDGs의 구성은 〈부록 1〉과 같이 17개 목표, 75개 세부목표, 171개 지표로 이뤄져 있다.

도출된 경상남도 SDGs는 녹색산업과 전략산업, 방재와 안전, 보편적 복지, 기후변화 대응 및 적

응력 강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등 유엔 SDGs 또는 국가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과 일반적으로 맞닿을 수 있는 의제들이 기본적으로 도출되었다. 그런데 이밖에도 하천을 활용한 에너지 발전, 군단위 농촌지역의 고령화나 외국인 증가 문제, 도시지역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증가, 전국평균보다 낮은 고용률, 전국 최단 산업단지 보유 등 지속가능발전의 잠재력이나 위기요인 등이 반영되었다.

〈그림 2〉는 경남 SDGs를 제3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유엔 SDGs 체계와 연계해 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은 포괄적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볼 때 경남 SDGs는 유엔 SDGs의 목표체계와 비교할 때 일정한 완결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향후 유엔 SDGs의 틀이나 17개 목표 체계로 볼 때, 경남 SDGs가 우선순위를 주로 어느 목표나 영역에 두고 있는지 또는 두어야 할지를 판단하는 데는 SDGs의 틀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림 2〉 경상남도 SDGs - 3차 국가 기본계획 목표 - 유엔 SDGs의 연계



2. 경상남도 SDGs의 활용

경상남도의 경우 본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한 바가 되고,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을 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행계획 수립,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위원회, 조례 제정 등의 정책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경상남도 SDGs 모니터링과 평가는 SDGs 이행계획과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SDGs 이행계획은 경상남도 SDGs 각 목표별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에 부서별, 기능

별로 설정된 목표와 단위사업을 SDGs 각 목표와 전략에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이행계획과 단위사업의 수행 여부는 기존의 성과관리 체계 하에서 유지될 수 있는데, 성과관리 차원을 넘어서 목표와 전략에 대한 기여 여부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의한 모니터링 및 평가로 측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부서의 이행계획이나 단위사업이 지속가능발전지표와 1대 1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속가능발전지표에 의한 모니터링과 평가는 지속가능발전지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이행계획이나 단위사업을 새롭게 바꾸었는지 여부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지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장려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경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경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경상남도 SDGs 중 우선순위가 높은 대표지표를 선정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도민과 공무원 인식 향상을 위한 소통 수단으로 활용하며, 전체 지표는 2년마다 평가하여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개선 피드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경상남도-시군 공통지표는 경상남도와 시군의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목표별 시군별 지속가능발전 차이와 상대적 취약지역을 파악하며, 시군이 SDGs 관련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한다.

통계자료에 의한 정량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조사가 필요하거나 모니터링을 통한 자료 구축이 필요한 경우 자료 생산을 위한 역할을 분담하여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통계 및 자료가 생산될 때까지 대체 지표 혹은 우선순위가 낮은 다른 지표를 사용한다. 경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의한 모니터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정책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발전 실천역량을 높인다. 단기적으로는 추세 변화를 평가하되, 대표지표의 경우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기준선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변화 추이를 평가한다.

향후 15년 동안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할 개발의제인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핵심인 SDGs에 대한 관심과 실천 노력이 증가할 전망이다. 환경국에서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추진하되, 기획부서를 통해 유관부서의 협조를 얻어 성과지표 및 행정계획과 SDGs를 연계하는 피드백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관부서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경남도의회 역할의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해 경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최대한 활용하되, 중앙정부의 제도화 수준과 연동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다. 경상남도 SDGs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해서는 도의회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통해 분야별 지속가능성을 진단, 평가할 수 있으므로, 경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도의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도의회에 지속가능성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경상남도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18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시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SDGs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경상남도 SDGs는 시군 SDGs를 수립할 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경상남도와 시군 공통지표는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한 시군의 여건을 진단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상남도와 시군의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 경상남도 목표를 달성하는데 시군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각 시군의 지속가능성을 공통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공통지표의 경우 매년 경상남도 시군평가 등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경상남도 SDGs 중 시군 종합평가지표에 포함되지 않지만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표에 대해서는 향후 시군종합평가지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평가담당 부서와 협의한다. 공통지표 평가는 단지 지표의 적용 및 평가결과를 공개하기보다는 경상남도 차원의 유엔 SDGs 기준으로 어떤 목표 분야에서 강점 또는 약점을 보이는지를 파악하는데 활용하고, 해당 분야 또는 권역별로 행정과 시민사회,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참여하는 평가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진단과 대안이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이 글은 유엔 SDGs의 채택에 발맞춰 경상남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SDGs 이행체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경상남도 SDGs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주무부서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기획,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SDGs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SDGs의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SDGs와 지속가능발전지표가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도출된 만큼 이를 도정의 이행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도정의 지속가능발전 가치의 구현과 도정의 성과관리에 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특히 시군 공통지표에 의한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통해서는 지속가능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파악하고 시범사업, 예산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경상남도와 시군의 지속가능발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해당 지표의 비교는 유사한 규모나 성격을 가진 타 시·군과의 비교·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이기에 보완책이나 대응책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경상남도 차원에서는 각 지표별 불균형에 대한 인식을 통해 중점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비교·평가가 가능한 지표의 경우 해당 지표의 개선이 유엔 SDGs의 어떤 목표에 기여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하게 함으로써 유엔 SDGs와의 연계 속에 경상남도 SDGs를 구축해 나가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상남도와 시군 공통지표 이외에 시군 SDGs 및 권역별 SDGs는 시군 또는 권역별로 지속가능성 수준의 특성이 부각되도록 하여 경상남도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이를 위해 시군 또는 권역별로 공무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간담회 또는 워크숍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경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상남도는 유엔 SDGs의 5P축에 기반하여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토론회 등을 준비함으로써 경상남도 SDGs의 전략과 이행계획,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시·군과 경상남도의 민선7기에서도 SDGs가 핵심적인 도정, 또는 시정·군정의 방침이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SDGs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SDGs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유용한 도구임과 동시에 조직의 성과관리

를 위해서도 활용 가능한 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적으로 논의와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연계 접근방법(nexus approach)은 이러한 활용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경상남도 SDGs 도출과정은 이러한 활용의 이론적, 실제적 함의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편 장기적으로 좀 더 체계적인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경상남도 SDGs 이행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가운데,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경상남도가 현재 시군 종합평가를 실시할 때 활용하는 시군 종합평가지표를 유엔 SDGs 17개 목표로 재배치함으로써 경상남도 시군의 평가를 SDGs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 경상남도 각 시·군 단위에서 수집·측정할 수 있는 자료에 기반하여 각 시·군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평가할 수 있는 자료와 영역이 제한적인 가운데, 각 시·군에서 확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지표를 수정 또는 보완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경상남도. (2012).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2012~2020)」.
- 경상남도. (2014). 「경상남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 경남발전연구원
- 경상남도. (2014). 「경상남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
- 경상남도. (2015). 「제5차 경상남도 지역에너지계획(2015~2019)」.
- 경상남도. (2016). 「경상남도 환경보전계획(2016~2025)」.
- 경상남도. (각 년도). 「통계연보」
- 관계부처합동. (201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8). 「시·도 공무원을 위한 지방지속가능발전 업무매뉴얼」.
- 국토교통부. (2015).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침」
- 김병완. (2016). “지속가능발전목표 국내 이행방안-국가비전과 이행체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민관협력방안 국회토론회」 자료집,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 김은주·권혁주. (2015). KOICA 공공행정 분야 SDGs 대응전략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 「국제개발협력」, 11월호: 37-52.
- 김인. (2015). KOICA 중장기전략에서의 SDGs 주류화 방안. 「국제개발협력」, 11월호: 3-35.
- 김지현. (2014).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 1: SDGs. 「개발과 이슈」, 19.
-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6).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 박정호·정소윤·김은주.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박지연·문경영·김은영·조동호. (2016).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과 북한개발협력: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23(2): 249-275.

- 서울시. (2016).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및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추진모델 개발」. 한국환경정책학회.
- 수원시. (2016). 「수원시 지속가능 평가 및 발전방향 도출」.
- 오수길. (2003). 파트너십 거버넌스의 가능성과 한계: '지방의제 21' 추진 과정의 경험. 「한국행정논집」, 15(2): 282-313.
- 오수길. (2016).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분석: 유엔 SDGs 시대의 함의. 「한국비교정부학보」, 20(2): 181-199.
- 오수길. (2017). 환경 거버넌스와 헌법: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로의 전환. 「한국비교정부학보」, 21(4): 245-259.
- 오수길·김은경. (2014).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성 평가 도입 방안: 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4): 363-385.
- 오수길·김은경·황순원. (2016).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부평구를 중심으로. 「NGO연구」, 11(2): 117-151.
- 오수길·이창언. (2013). 한국 지방의제21의 새로운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7(2): 441-464.
- 오수길·이춘열. (2018). 주민자치와 로컬 거버넌스 사례 연구: 고양시 자치도시 실험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3(2): 125-158.
- 이창언·오유석. (2017). Post-2015 체제와 지속 가능 발전. 「동향과 전망」, 101: 167-196.
-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5).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실행 점검 및 지표 조정 연구」.
- 조성제·박현희. (201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우리나라 국제농업개발협력 연계 개선방안. 「통상정보연구」, 17(4): 253-278.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6). 「지방지속가능발전 로드맵(안) 추진방안」.
- 충청남도. (2013).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보고서 연구용역」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2017).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경기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 (2015). 「시정 경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
- 환경부. (201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 연구」.
- ICLEI. (2013). 「세계 지방의제21 20년사」,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역. 서울: 리북; Local Sustainability 2012: Taking Stock and Moving Forward - Global Review. ICLEI, 2012.
- ICLEI. (2016. 5). 도시,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클레이 브리핑 시트 2: 도시 이슈」.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 KOICA. (2006). 지구촌가족 Newsletter. 2006년 2월호
- Atkinson, Giles. (2000).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licy. In Helm(ed.), *Environmental Policy: Objectives, Instruments, and Implementation*, 29-4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aker, Susan, Maria Kousis, Dick Richardson, and Stephen Young. (1997). Introduc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EU Perspective. In Susan Baker,

- Maria Kousis, Dick Richardson, and Stephen Young(eds.), *The Politics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ory, Policy and Practice within the European Union*, 1-40. London: Routledge.
- Florini, Ann and Markus Pauli. (2017). Collaborative Governanc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ia and the Pacific Policy Studies*, 1-16.
- Jacobs, M. (1991). *The Green Economy: Environment,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Politics of the Future*. London: Pluto Press.
- Le Blanc, D. (2015). Towards Integration at Las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a Network of Targets. Department of Economic & Social Affairs Working Paper, 141.
- Magretta, J. (2002). Why Business Models Matter. *Harvard Business Review*, 80: 3-8.
- O'Riordan, Timothy. (1995). The Radical Agenda of Localism and Democracy. *Town and Country Planning*, July: 162-163.
- Stafford-Smith, Mark et al. (2017). Integration: the Key to Implemen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ustainability Science*, 12: 911-919.
- Stakeholder Forum for a Sustainable Future. (2012). Rio+20: Analysis of Zero Draft Submissions.
- Stibbe, Darian et al. (2018). *Maximising the Impact of Partnerships for the SDGs: a Practical Guide to Partnership Value Creation*. NY: UNDESA.
-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2015). "Indicators and a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aunching a Data Revolution", May 15, 2015.
-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2016). Getting Started with the SDGs in Cities: A Guide for Stakeholders, July 2016.
- UN-Habitat. (2016a). SDG Goal 11 Monitoring Framework: A Guide to Assist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o Monitoring and Report on SDG Goal 11 Indicators, UN-Habitat
- UN-Habitat. (2016b). The City Prosperity Initiative(CPI), UN-Habitat
- United Nations.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WCED.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http://www.gyeongnam.go.kr/>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kosis.kr/statisticsList/>

ICLEI -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http://www.iclei.org/advocacy/post2015.html>

Stakeholder Forum <http://www.stakeholderforum.org/fileadmin/files/sdtimelineswf.swf>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hlpf>

United Nations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indicators-list/>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https://unstats.un.org/sdgs/indicators/indicators-list/>

Wayne Visser <http://www.waynevisser.com/>

오수길(吳洙吉):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지방정부의 민-관 파트너십 사례 연구, 2002), 고려사이버대학교 창의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거버넌스, 지속가능발전, 행정 철학이고,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모델」(2018, 공저), 「우리의 지속가능한 도시」(2017, 공저), 「민주주의, 종교성, 그리고 공화적 공존」(2017, 공저), “주민자치와 로컬 거버넌스 사례 연구”(2018, 공저), “환경 거버넌스와 헌법”(2017) 등이 있다.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soogiloh@gmail.com).

한순금(韓順金):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지속가능성 관리 도구로서의 생태발자국 방법론 고찰, 2012), (사)기후변화교육연구센터 연구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지속가능발전, 기후와 에너지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목표를 수립하고 지표를 통해 목표의 이행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저서와 논문으로 「LCA(Life Cycle Assessment) 환경부하를 평가한다」(1997, 공저), “생태발자국 표준방법론의 한국적 적용”(2011, 공저), “소비범주를 중심으로 한 생태발자국 측정”(2011, 공저) 등이 있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비롯하여 경기도, 수원시, 원주시 등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hpgold@empas.com).

〈논문접수일: 2018. 10. 10 / 심사개시일: 2018. 10. 15 / 심사완료일: 2018. 11. 25〉

〈부록 1〉 경상남도 SDGs 목표와 세부목표

UN SDGs	경상남도 SDGs			
	목표	세부목표	지표	
1	빈곤	1. 빈곤 격차를 줄인다.	1.1. 상대적 빈곤층을 줄인다.(1.2)	1.1.1 상대빈곤률(전체 도민,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으로 구분하여 산출)
			1.2.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1.4)	1.1.2. 노령연금수급률(성별) 1.1.3. 신규 수급자 발굴
			1.3.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1.5)	1.2.1.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RIR)(성별) 1.2.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3.1 치매노인(성별) 1.3.2. 노인돌봄서비스 이용률 1.3.3. 장애인돌봄서비스 이용률
2	식량, 농업	2.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지역농산물 이용을 촉진한다.	2.1 지속가능한 농업/수산업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인다(2.3/2.4).	2.1.1 식량자급률 2.1.2 친환경농지면적 비율 2.1.3 영세소규모 농가 비중
			2.2 로컬푸드 거래 지원 시스템을 형성한다. (2.3/2.4).	2.2.1 로컬푸드 직매장 수 및 매출액 2.2.2 공동급식, 잉여생산물 매입 2.2.3 도시농업 면적
			2.3 소규모 식량생산자, 특히 여성, 선주민, 가족농의 소득을 두 배로 늘린다.(2.3)	2.3.1 여성 농어업인 교육기회 확대(성별) 2.3.2 로컬푸드 판매액(성별)
			2.4 식생활 교육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음식물 낭비를 줄인다(2.3).	2.4.1 유치원(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1인당 식생활 교육 횟수 2.4.2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2.5 안전한 먹거리 관리체계를 갖춘다.	2.5.1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2.5.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학교 수
			3.1. 질병예방을 위해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한다(3.4).	3.1.1. 건강검진율 3.1.2.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유병률
3	건강과 웰빙	3.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건강수명을 늘린다.	3.2. 일상생활에서 건강행태 실천율을 높인다(3.5, 3.a).	3.2.1. 현재 흡연율 3.2.2. 고위험 음주율 3.2.3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3.3. 주체적인 삶을 위해 정신건강을 보장한다(3.4).	3.1.4 EQ-5D 삶의 질 3.3.1. 자살률 3.3.2. 노인자살률
			3.4 감염병 발생을 줄인다(3.3).	3.4.1 결핵신환자 발생률 3.4.2 영유아 완전접종률(생후 18개월 이내)
			3.5 공공 의료체계를 강화한다(3.8).	3.6.1 보건의료예산 비중 3.6.2 공공병원 병상 수
			3.6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해성을 줄인다(3.9).	3.6.1 환경성질환자 비율
			4.1. 전체도민에게 평생학습 및 자기개발 기회를 보장한다(4.3).	4.1.1. 평생·직업교육 예산 4.1.2. 평생학습 참여율 4.1.3. 평생교육시설 수 4.1.4 저소득층 가정의 평생학습
4	교육	4. 생애주기별로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4.2. 신체적·경제적인 이유로 교육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교육기회를 보장한다(4.1, 4.2).	4.2.1. 공립학교 특수교사 수 4.2.2. 취약계층 1인당 교육지원예산

			4.3. 취약계층의 직업훈련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한다(4.4, 4.5).	4.3.1 장애인직업능력프로그램 참여율 4.3.2. 노인일자리 예산(노인인구대비) 4.3.3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실적 4.3.4 청소년 진로교육(횟수, 참여자 수)
			4.4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시한다.(4.7)	4.4.1 민주시민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수 4.4.2 공교육 양성평등 교육 수 4.4.3 노인성평등교육(성별, 마을) 4.4.4 지속가능발전 시민교육 이수자 4.4.5 인재개발원 지속가능발전 교육과정 및 이수 공무원 수 4.4.6 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 참여 학교 수 4.4.7 환경교육 참여 학교/학생 수
5	성평등	5. 여성의 사회참여 및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성인식을 향상한다.	5.1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확대한다.(5.c)	5.1.1 성인분리통계(성인지통계) 작성 수
			5.2 개발과 환경 및 모든 공공영역에 여성참여를 보장하고 여성리더십을 확대한다(5.5).	5.2.1. 여성경제활동참여율 5.2.2. 고위공무원 비율
			5.3 양질의 돌봄 및 가족지원 서비스의 사회적 지원체계를 강화한다(5.4).	5.3.1. 국공립어린이집비율 5.3.2.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자 수(비율) 5.3.3 결혼 전 성평등교육
			5.4 물리적 힘이 약한 상대에 대한 폭력을 근절한다(5.2).	5.4.1. 여성 폭력 상담건수 5.4.2. 가정폭력 비율
6	물	6.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 물순환체계를 회복한다.	6.1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한다(6.1/6.3).	6.1.1 상수도 보급률 6.1.2 미급수 지역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율
			6.2.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6.4).	6.2.1 유수율 6.2.2 1인당 물사용량(가정용)
			6.3 물순환을 회복한다(6.3/6.4).	6.3.1 하수재이용율 6.3.2 빗물이용량 6.3.3 불투수면적 비율
			6.4 내 고장 하천 살리기(6.6).	6.4.1 수생태 건강성 경상남도 측정망 수 6.4.2 수생태 건강성 등급 6.4.3 생태하천 복원(도랑, 샐강) 6.4.4 주요하천, 호수, 지방하천 및 지천 수질 좋은 물 등급 달성 비율
7	에너지	7. 에너지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에너지 전환 비율을 확대한다.	7.1 지역 간, 계층 간, 에너지 서비스 격차를 줄인다(7.1).	7.1.1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에너지 서비스 제공 7.1.2 에너지 빈곤 가구 비중(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구)
			7.2.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7.2).	7.2.1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7.3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7.3).	7.3.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현황
8	일자리 경제성장	8.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한다.	8.1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역경제성장률 3%를 유지한다(8.1).	8.1.1 실질 지역총생산액(GRDP) 성장률
			8.2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처기업과 청년창업을 활성화한다(8.3).	8.2.1 벤처기업 창출 일자리수 8.2.2 청년창업 지원(건수, 지원금액)

			8.3 장애인, 청년, 여성, 노인, 이주민 등에게 공평한 고용 기회를 제공한다(8.5, 8.6).	8.3.1 고용률(성별, 연령별) 8.3.2 장애인 고용률 8.3.3 청년 실업률
			8.4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산업재해를 줄여 고용 안정과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한다(8.8).	8.4.1 비정규직 비중(성별) 8.4.2 산업재해율
			8.5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8.3)	8.5.1 재래시장(상품권) 판매액
9	산업, 혁신, 인프라	9. 산업구조를 다변화한다.	9.1 교통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대중교통과 녹색교통 이용을 높인다(9.1).	9.1.1 대중교통 분담률 9.1.2 녹색교통 분담률 9.2.3 남부내륙철도 연장(km) 9.2.1 청정산업 부가가치 비중 9.2.2 지식서비스업 비중 9.2.3 제조업 에너지 효율성
			9.2 경남의 산업구조를 사람중심 산업으로 전환한다.(9.2, 9.4).	
			9.3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한다(9.2).	9.3.1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중
			9.4 관광·콘텐츠 산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확대한다(8.9).	9.4.1 관광 및 콘텐츠 산업 일자리 수
10	불평등감소	10. 지역 간,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한다.	10.1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도시재생을 활성화한다(11.3).	10.1.1 지역 간 소득격차 지수(지니계수) (경상남도 지니계수, 경남 동-서부 GRDP 비중) 10.1.2 도시재생 시범사업 수 10.1.3 마을의제 작성 비율
			10.2 고용형태별,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한다(10.4).	10.2.1. 고용형태(정규직과비정규직간)별 임금격차 10.2.2. 성별 임금격차
			10.3 저소득층의 일자리 참여율을 제고하여 소득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인다(10.1).	10.3.1. 자활사업 참여율 10.3.2. 자활사업참여자 탈수급률
			10.4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 다문화 사회수용을 확대한다(10.7).	10.4.1 다문화 이해교육 횟수 10.4.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실적
			11.1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비 보조 정책을 강화하여 주거걱정 제로화 사회를 만든다(11.1).	11.1.1 공공임대주택 비율 11.1.2 주거비보조 가구 수
			11.2 개인과 지역 간 이동 차별없는 교통복지를 실현한다(11.2).	11.2.1 (지역 유형별) 평균 출퇴근 시간 11.2.2 저상버스 도입 대수
11	도시, 공동체	11. 누구나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한다.	11.3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3.6).	11.3.1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11.3.2 교통안전지수
			11.4 문화와 역사가 살아 있는 멋있는 살터를 만든다(11.4).	11.5.1 경상남도 문화재 지정 건수 11.5.2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건수 11.5.3 문화공간 시설 수
			11.5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시대를 구현한다(11.6).	11.5.1 오존경보 횟수 11.5.2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기준 초과율
			11.6 취약계층에 대한 방재대책을 강화한다.(1.5)	11.7.1 자연재해 위험지구 11.7.2 재난사고발생 및 피해 현황
			11.7 안전하고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공장소를 확충한다(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	11.7.1 시가화면적 대비 도시공원면적 비율 11.7.2 무장애도시 설계 적용 건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건수)

			인)(11.7/16.1).	11.7.3 여성친화도시 지정 건수
12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12. 자원순환을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한다.	12.1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환경부하를 줄인다(12.2/8.4).	12.1.1 1인당 생태발자국 12.1.2 1인당 에너지 사용량 12.1.3 1인당 폐기물 발생량
			12.2 인체 건강과 환경에 위협한 화학물질 배출을 줄인다.(12.4)	12.2.1 화학물질 배출량
			12.3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우리 동네 쓰레기를 제로화한다.(12.5)	12.3.1 생활폐기물 매립률 12.3.2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12.3.3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률
			12.4 녹색생활/녹색소비를 실천한다.(12.7)	12.4.1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율
			12.5 사회적 경제/공유경제를 확산한다(9.3).	12.5.1 사회적경제 매출액 12.5.2 사회적경제 종사자 수
			12.6 적정기술을 확산한다.(9.4)	12.6.1 적정기술 사회적 기업 수
			13	기후 변화
13.2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13.1/11.5/1.5),	13.2.1 자연재해 피해액 13.2.2 자연재해 인명피해			
13.3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실행력을 높인다.(13.1, 13.2).	13.3.1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률 13.3.2 기후변화 관련 민관거버넌스 기제 운영 유무			
13.4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취약성을 낮춘다(13.3).	13.4.1 기후변화 교육 이수자 수 13.4.2 기후민감질환자 비율			
13.5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그린인프라를 조성한다.(13.1)	13.5.1 지방하천 개수율 13.5.2 하천부지 점용 비중			
14	해양 생태계	14. 연안환경을 보호하고 건강성을 유지한다.		
			14.2. 해양 부영양화를 개선하고 해양폐기물을 저감한다.(14.1)	14.2.1 해양 부영양화 14.2.2 해양폐기물 수거량 14.2.3 해양 유류사고 피해 규모
			14.3. 해양 및 연안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복원을 강화한다.(14.2/14.5)	14.3.1 연안습지(갯벌) 면적 14.3.2 연안 갯벌 및 복원 대상 수 14.3.3 공유수면 소규모 매립 조정 건수
			15	육상 생태계
15.2 토양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좋은 흙을 보전한다.(15.3)	15.2.1 토양오염 기준 초과율 15.2.2 단위면적 당 화학비료 사용량			
15.3 생물다양성을 증진한다(15.4, 15.5, 15.8).	15.3.1 따오기 복원 개체 수 15.3.2 생물종 및 생물유전자원 DB 등록 건수 15.3.3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및 경상남도 보호종 지정 수			
16	정의, 제도	16.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청렴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경상남도를 만든다.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감소시킨다.(10.3 16.2).	16.1.1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률 16.1.2 범죄예방도시 환경디자인 조례 제정 여부(시군) 16.1.3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16.1.4 노인학대 건수
			16.2 공공기관 청렴도와 행정만족	16.2.1 경상남도 공공기관 청렴도

		도를 향상시켜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16.5, 16.6)	16.2.2 지자체 행정 만족도	
		16.3 실질적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 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한다.(16.7)	16.3.1 주민참여 예산 비율	
		16.4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통해 주민 알권리를 충족시킨다.(16.10)	16.4.1 사전정보공개 목록수 16.4.2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	
		16.5 미래세대의 정책참여 기회를 높이고 역량을 배양한다(16.7).	16.5.1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실적 16.5.2 지방의제21 청소년 참여 위원회 활동 실적	
17	파트너십	17.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외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17.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선도한다(17.2, 17.16, 16.8).	17.1.1 ODA 예산 비중 17.1.2 ICLEI 회원 지자체수
			17.2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를 갖춘다(17.14).	17.2.1 SDGs 모니터링 지자체 수 17.2.2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 예산
			17.3 시민사회조직과의 협력체계를 활성화한다(17.17)	17.3.1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및 지방의제21(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 비율 17.3.2 민관 파트너십 수준
			17.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17.16/17.17)	17.4.1 ISO26000 보고서 작성 기업 수 17.4.2 기업의 사회적책임 예산

Abstract

SDGs and Transformation of Goal Systems in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Gyeongsangnam-do

Oh, Soo-Gil

Han, Soon-Keum

This study focused on the framework of SDGs as a useful too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Gyeongsangnam-do keeping pace with UN SDGs. We argue that transforming the goal systems of local governments in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DGs system will contribute to activating collaborative governance as well as overcoming existing silo effects. For this we planned establishing process for SDG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with the responsible department and Local Sustainability Council of Gyeongsangnam-do, and drew SDG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of Gyeongsangnam-do through survey and town hall meeting. As a result, the SDGs of Gyeongsangnam-do match well with UN SDGs and Korean National Master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e suggest that Gyeongsangnam-do has to use this SDGs for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r the framework of SDGs will be useful for implementing of each department to achieve the SDGs by implementing each task. Moreover Gyeongsangnam-do can apply to cooperation and linkages among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Key Words: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ystems,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local government